**유엔 보고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제도화된 강제노동,**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

제네바 (2024년 7월 16일) –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되었으며 여러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는다고 전했다.

동 보고서는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해당국을 탈출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 및 증인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도 이에 포함된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에 담긴 진술내용을 통해 강제노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규모 면에서나, 폭력 및 비인도적 대우의 수위 면에서나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는데, 심지어 급여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보호∙의료 조치나 휴식 시간도 제공되지 않고, 식량이나 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부문 노동을 도맡는 일이 빈번하다.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고 구타는 예사로 당하는 한편, 여성은 계속해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더했다.

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일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맞았다. 밥도 적게 준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아는 언니가 작업반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힘들어했[다]”고 기억했다.

보고서는 여섯 가지의 강제노동 유형을 살피는데, 구금 시설 내 노동,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 징집, 혁명 “돌격대”의 활용, 작업 동원,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한 이들이 수행한 노동이다.

보고서는 해당국 국민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에 착취당한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해당 제도가 “국민을 통제 및 감시하며 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이라고 더한다.

특히 구금 시설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서 강제노동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비인도적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노동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구금된 민간인을 거의 완전히 통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도소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착취는 일부 경우 사실상 개인에 대한 “소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학교 교육이나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정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거주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보고서에 묘사된 것처럼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가 없고,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으며, 직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구금될 위협에 놓이고, 급여가 계속해서 미지급되는 행태는 해당국 내 제도화된 강제노동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10년 이상 복무할 의무가 있는 군 징집병은 농촌 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것을 일상적으로 강요받는다. 보고서는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이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조치도 없다”고 묘사한다.

과거 간호사로 의무 복무를 하면서 군인을 치료했던 이는 “허약 오는 군인은 대개 결핵이 오는데, 육체적으로 약하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전했다.

작업 동원의 또 다른 형태로는 “돌격대”가 있는데, 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한 시민 집단으로 주로 건설 및 농업 부문에서 “고된 육체 노동”을 강요받는다. 수 개월, 심지어 수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이들은 노동현장에 거주해야 하고, 보수는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여성이 가정의 주된 소득원인 경우가 흔하기에 작업 동원은 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민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외노동자로 파견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도록 한다. 노동자들은 국가에게 급여의 90 퍼센트를 몰수당했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여권은 압수 당했으며, 비좁은 숙소에 거주하며 휴식시간은 거의 없었고, 가족과 연락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화된 노동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강둑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노동을 강요받는다. 한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 하여금 “강제노동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보고서는 책임 규명 보장을 위해 국제공동체에게 국제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수사 및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 더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최고대표는 “경제 번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국민을 노예로 삼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양질의 일자리, 선택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은 모두 노동에 대한 권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사회 전역에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